

북한 주민의 소비생활 변화와 함의

Changes in North Korean Consumer Life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조성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2000년대 이후 북한 통치세력은 핵심적인 기업과 산업이라 할 수 있는 군수 산업, 중공업 부문은 국가가 직접 관리·통제하지만 경공업 부문 등 소비재 부문과 일부 몰자 유통 시장은 시장에 맡기는 방식의 이중 구조화를 선택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통해 전체 인민들에게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 주겠다는 통치 전략에 기반하여 경공업 육성과 보건의료 부문의 현대화를 꾀하고 있다. 이에 의생활의 다양화 및 브랜드 형성, 가전제품과 핸드폰 사용의 증가, 교통수단 이용의 확대, 여가 활용을 위한 위락시설의 증가 등 주민들의 소비생활에서의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시장화에서 파생된 소득의 불균형은 하위 계층들의 삶과 생활의 곤란으로 이어지며 노동의 상품화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 상위 계층들은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적당한 여가 문화와 휴식 공간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남북 교류·협력의 핵심은 단순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넘어서 북한의 낙후된 지역의 종합적 개발, 북한 인적 자본의 향상과 같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기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들어가며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일시적이었지만 화해의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북한 도시 풍경과 일상의 변화상을 소개하는 뉴스, 텔레비전(TV)의 보도들, 대중 서적들이 갑자기 늘어났던 시기가 있었다. 언론들은 평양에서 주로 나타나는 외

관의 변화들, 대표적으로 새로 지어진 고층 아파트와 상품으로 가득한 상점들을 놀라움의 시각으로 보도했다. 여기에서 보이는 북한의 모습은 “아래로부터의 소비의 열망과 갖가지 사물을 통해 경험하는 [북한 주민들의] 외부 세계와의 접촉은 더 이상 불온한 인민을 식별하는 표지가 아니게” 된, 획기적인 시각의 변화였다(한재현, 고유

환, 2020, p. 114).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제2차 북미회담이 결렬되고 남북 관계가 다시 경색되면서 북한의 미사일 실험 재개, 집단주의적 통치 등이 부각되었다. 여기에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즉각적으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북한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폐쇄적이며 전근대적인 사회라는 인식이 다시 팽배해졌다. 부족한 식량의 문제는 여전히 군부를 중심으로 사회를 통제하여 세습한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전형적인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는 바로 그 인식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렇다면 일시적으로 주목했던 북한 사회의 변화상은 어떻게 된 것일까? 그리고 우리가 사회정책의 관점에서 북한에 접근할 때 어떠한 이해에 기반해야 하는 것일까?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부족한 정보 범위에서라도 북한 주민의 소비생활의 변화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북한 주민의 생활에 대한 파악이 바탕이 되어야 향후 남북 교류·협력의 방향과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후 북한 사회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요청된다.

2.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사회의 변화

가. 북한 경제의 시장화¹⁾와 사회주의 경제건설 노선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90년대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 일컫는 심각한 경제난은 북한의 계획경제 시스템을 거의 와해시켰고, 장마당으로 대표되는 시장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도 북한 시장은 계획의 공백을 메우면서 자기 확장을 거듭하여 성장하였고, 북한 당국 역시 시장을 인정하고 나아가 시장과 공존을 꾀하는 단계에 접어든 것이 분명하다. 자생적 시장 확대를 넘어 경제 시스템 측면에서 계획을 보충하는 시장 역할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북한 통치세력은 핵심적인 기업과 산업이라 할 수 있는 군수 산업, 중공업 부문은 국가가 직접 관리·통제하지만 경공업 부문 등 소비재 부문과 일부 물자 유통 시장은 시장에 맡기는 방식의 이중 구조화를 선택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변화가 포착되었는데, 김정일 집권기인 2002년 단행된 7·1경제관리조치에서도 내용상 계획경제의 실패를 인정하고 시장경제 체제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양문수, 2010). 7·1조치의 내용에는 기존 농민시장에서 공산품과 수입 상품까지 거래할 수 있

1) 북한 경제의 시장화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데, 계획경제 체제 아래서 배급 중심의 생산·유통 시스템과는 다른, 시장 기제의 도입과 확산으로 정의할 수 있다. 포괄적으로 볼 때 시장 기제는 결국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고 가격이 일종의 신호로서 “가계, 기업 등 경제적 의사결정 단위의 경제적 행동, 나아가 거시경제 전체의 자원 배분이 조정되는 것”으로 규정된다(양문수, 2010, p. 6).

록 하고 암시장을 통합해서 종합시장으로 제도화 하는 조치가 포함되었다. 이후 2003년 5월 종합 시장 운영에 관한 내각 지시에 따라 전국에 300 개가량의 종합시장을 설치했다(김병로, 2014, p. 333).

2012년 시작된 김정은 체제에서는 시장의 부분적 수용이 더 진전되어 이른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기 시작한다. 2013년 3월 김정은 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현실 요구에 맞게 우리식의 경제관리방법을 연구 완성할 것”을 지시하였고(양문수, 2016, p. 115), 2014년 4월에는 조선신보 보도에서, 북한은 2013년 3월부터 “전국의 모든 생산단위들이 경영활동을 독자적으로 벌여 나가

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라고 공식 발표하였다(양문수, 2014, p. 61). 기업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여 계획 수립과 생산, 처분을 기업에 맡기고 벌어들인 수입의 일부를 국가에 납부한 뒤 나머지 부분의 사용을 기업이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윤을 많이 남긴 기업의 경우 노동보수가 대폭 증가하고 새로운 품목의 개발과 가격 설정 역시 기업이 주도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부 나타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업 부문에서도 농장책임관리제와 포전담당 책임제를 시행해 증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조치들이 취해졌다. 농장책임관리제란 “협동농장과 농장이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하여 실제적인

표 1. 북한의 농장법 개정 사항

구분	종전 법령	2012~2015년 개정 법령
농장의 경영활동원칙	언급 없음	농장책임관리제의 실시
농장 운영 관련 제도	분조관리제, 작업반우대제, 독립채산제 실시	분조관리제 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와 유상유벌제 실시
계획지표의 분담	언급 없음	중앙지표와 농장지표의 구분, 농장은 중앙지표 달성 전제하에 자체로 농장지표 계획화 가능
농업생산조직 및 노동력배치	언급 없음	여러 부업생산단위 자체 조직 가능. 직종별 노동력배치 관련 자율성 확대
농장의 재정 관련 권한	언급 없음	농장의 현금 보유 가능, 농장지표를 통해 획득 자금의 경영활동 무제한 사용 가능, 주민들의 유휴 화폐 자금 동원 이용 가능
결산분배	원론적 언급 (현금분배방식)	현물분배를 기본으로, 현금분배를 결합하는 방식
국가 구매와 농장의 자율처분	일정 수량만 남겨 두고 전량 국가에 구매	국가 구매량 납부 이후 남은 물량을 농장이 자율적으로 처분 가능
가격 제정 및 판매 권한	일부 농산물을 직매점에서 판매 가능	국가 구매량 납부 이후 남은 물량을 기관, 기업소 등에 판매 가능, 농장지표와 부업생산물은 농장 자체로 가격 결정 및 판매 가능

자료: 양문수. (2017). 김정은 집권 이후 개정 법령을 통해 본 ‘우리식경제관 방법’. 통일정책연구, 26(2), p. 84.

경영권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창발적으로 하여”, “농업근로자들이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농장관리방법”이다(심철룡, 2019, p. 39). 농장책임관리제의 연장선상에서 시작된 포전담당책임제는 협동농장의 하위 단위였던 분조를 포전으로 더 작게 나누고 각 포전별로 생산량, 토지사용료, 영농물자, 비료 등의 대금을 현물로 상납하고, 나머지 농작물에 대한 처분권을 포전별로 소유하는 방식이다. 포전담당책임제는 2014년 이후 전국적으로 실시되었고, 2015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장법’의 분조관리제 조항 안에 포전담당책임제를 삽입하여 법제화를 하였다(양문수, 2017, p. 84).

북한이 시장을 경제 시스템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미 주민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물자들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한 것인 동시에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통해 전체 인민들에게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 주겠다는 통치 전략에 기반한 선택이기도 하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병진노선, 즉 핵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군사력 확보와 함께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통해 인민들의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겠다고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특히 핵무기 기술 확보에 자신을 얻은 이후에는 좀 더 경제건설에 집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2019년 4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언”하고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로선을 제시”하였는데, 이 회의에

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 기간에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전체 인민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 주는 것을 전망목표로 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노동신문, 2019. 1. 11.). 북한 문헌에서 ‘문명’이란 표현은 다양한 함의를 지니는데 결국은 서구를 기준으로 한 생활 수준과 문화 향유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서구를 향한 한편의 열망과 다른 한편의 두려움으로 모방과 변안의 통치 전략들을 나름대로 구사하면서 사회주의라는 기표에 ‘문명국’을 접합시킨”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한재현, 고유환, 2020, p. 114). 유럽에서의 유학 생활을 통해 자본주의 국가들의 물질적 수준을 경험한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적 경험을 고려할 때 상당한 수준의 물질적 향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요컨대 북한은 계획경제에 일정 정도의 시장을 공식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국가 경제를 성장시키고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끌어올려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지지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전략을 지속해 갈 것으로 보인다.

나. 김정은 체제의 인민 생활 개선 정책

북한이 사회주의 문명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인민 생활 개선을 위한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경공업 육성과 보건의료 분야의 현대화를 꼽을 수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농업과 함께 경공업을 경제

의 핵심 분야로 선정하여 농업 부문에서 경제개혁 조치를 시행한 것과 같이 경공업 부문에서 ‘인민 생활 필수품’ 생산을 위한 적극적 개혁 조치를 취하여 왔다. 북한은 2013년 3월 18일 전국경공업대회를 개최하였고, 이 대회에서 김정은은 “경공업 발전에 역량을 집중하여 경공업을 종자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완강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김정은, 2013. 3. 18.). 2015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사대와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라면서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수입병을 없애고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할 것을 지시하였다(김정은, 2015. 1. 1.). 경공업 생산을 증대하되 자본, 기술 및 원료의 수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내의 공업 생산 토대를 강화하여 국산제품을 생산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강조의 배경에는 북한이 처한 대내외의 정치적 환경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는 자립적 경제 강국을 건설하는 것이 목표이다(리기성, 2017, p. 47). 김정일 시기에 주저했던 경제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이유도 현 시기 경제성장만이 김정은의 통치력 확보, 지지 기반 강화, 사회적 균열의 완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공업에 대한 강조는 이러한 성장의 성과가 일상생활에서의 소비 증가로 연결될 수 있도록 북한 내 생필품 생산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이다. 시장화와 함께 일상 생필품의 소비가 늘어날수록 북한의 내수시장은 대중국 의존도가 심화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북한 내 경공업 육성을 통해 자체 생산 증대로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2016년 이후 북한 핵 문제로 인해 국제사회의 대북한 경제제재가 심화되면서 전반적인 교역이 줄어들자 이를 돌파할 수 있는 대안적 경제정책이 요청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자강력 경제’를 정치적 목표로 삼아 경공업 분야를 먼저 개선·현대화하고, 경공업 제품의 질을 개선하여 수입품을 대체할 수 있도록 대량생산, 질 좋은 상품 생산, 그리고 낮은 가격의 제품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보건의료 부문에서의 현대화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2019년 신년사에서 “인민들이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실감할 수 있게 제약공장들과 의료기구공장들을 현대화하고 의료기관들의 면모를 일신하며 의료봉사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와 같이 보건의료의 현대화는 북한 주민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낙후된 보건의료 체계가 북한 체제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김정은, 2019. 1. 1.). 북한이 1960년대 완성했다고 자랑했던 ‘무상 의료 체계’는 과거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 주는 상징으로 사용된 바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북한의 보건의료 시스템은 무상치료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다. 1990년대 초반의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1990년대 중반의 자연재해에 따른 열악한 경제 상황으로 국가에서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의료 자원, 특히 의료시설과 의약품,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제품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

다. 탈북의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병원 내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개인이 의약품을 장마당에서 구입해서 복용하고 있어 무상치료는 일부 계층에 국한된 것으로 전락했다. 장마당에서 구입한 의약품 품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손쉽게 구한 의약품의 오용과 남용이 심각한 상황을 불러일으킬 것을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일반인은 장마당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후에 진료소나 병원에서 구입한 의약품을 복용하기도 하지만, 의사들은 사실상 시장화되어 있는 의료서비스 시스템에서 살아남기 위해 도매상에서 직접 약을 구입하여 환자에게 돈을 받고 약을 판매하거나 일과 후 개인 진료소를 운영하여 선물 등 물질적 보상을 받고 진료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조성은, 2020).

이러한 현실을 보건의료 현대화를 통해 타개하고 사회주의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제약공장의 현대화, 평양종합병원 건설과 같이 규모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차례 현지를 방문하고 북한 언론 매체들을 통해 선전했던 평양종합병원 건설은 예정된 2020년 가을을 지나서 지금까지도 완공의 소식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만큼 북한의 의도와는 달리 인민 생활 개선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물질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다.

3. 북한 주민의 소비생활의 전반적 변화²⁾

현실적으로 북한 당국의 정책 목표가 실현될 수 있는 기술과 자원이 있는가는 다소 평가가 엇갈린다. 한국은행의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치를 보면 대북제재 이후인 2018~2019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성장지수는 68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 상황이 심각했던 1990년대 후반의 수준과 큰 차이가 없는 수치이다. 최근 북한의 경제 상황이 수십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한 1990년대 후반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이다(김규철, 2021, p. 5). 그러나 다른 에너지, 전력, 유류, 기대수명, 영유아 사망률, 영양 공급, 인공 위성 야간 조도 등의 실물 지표를 바탕으로 추정한 연구에서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다. 특히 보건과 영양 분야의 지표로 추정한 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추세를 살펴보면 1990년대 중후반부터 회복되어 199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보건 분야의 실물지표로 추정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회복 속도는 다른 분야보다 빠른 편으로 2018년에는 1990년의 1.6배 수준으로 추정되었다(김규철, 2021, p. 21).

양적인 수치로 확인하기 어려운 북한 주민의 생활 수준에 대한 문제는 결국 질적인 자료로 보충적으로 파악해야 하는데, 북한이탈주민들과의 인터뷰 경험 등을 바탕으로 탐색한 결과를 눈에 띄

2) 이 장에서 기술한 사례들은 “남북 간 사회격차 완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복지체제 구축 방안 연구: 북한 주민의 생활실태를 중심으로”(조성은 외, 2020)의 제6장과 제7장의 내용 중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의 변화를 알 수 있는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임.

는 대표적 사례들을 중심으로 다음에서 살펴본다.

가. 의생활의 다양화

의류 생산 부문은 북한 당국이 추진하는 경공업 분야 중 가장 먼저 활성화되고 대중화된 시장화 영역이다.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산 의류제품이 원단, 반가공품, 완성품 및 중고 제품의 형태 등으로 다양하게 수입되었다. 여성에게 특화된 방직, 의류, 섬유, 피복 분야는 대부분이 외화벌이를 위한 수출 임가공 형태로 운영되거나, 평안남도 평성시와 함경북도 청진시를 거점으로 하여 전국적인 생산 유통 체계를 갖추고 있다. 여러 북한이탈주민이 옷만 봐도 어느 지역 생산품인지 알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의류 생산 영역에서는 분업화,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의 의류 시장이 나날이 성장한 이유는 북중 간의 의류 생산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대북 위탁가공이 활성화된 데 기인한다. 2010년을 전후하여 중국의 제조업 활동은 한계에 직면하였으며, 제조원가에서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 의류, 섬유, 전자조립과 같은 노동집약적 업종의 일부 기업체는 중국 내에서 생산 활동과 경영 수익이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 의류 부문의 생산업체는 북한에 위탁생산하는 방안을 적극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시장화 과정에서 숙련된 북한의 노동력은 값싼 임금과 높은 기술숙련도를 바탕으로 중국의 변화하는 기업 환경과 맞물리면서 수출 생산을 확장하였다. 중국 측이 북한에 생산설비와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북한에서 제품을 생산

하는 중국 기업의 임가공 사업이 확대되었고, 북한은 경제개혁을 통해 대외무역을 확대하고 임가공 수출을 증대하면서 특히 수출에서 의류제품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된 것이다(이중운, 2017, p. 8).

한편 북한 당국이 의복생활의 현대화를 적극 강조하고 있는 경향이 반영되어 북한에서도 의생활의 다양화와 초보적인 수준의 브랜드 형성이 시작되었다. 북한은 “인민의 옷차림과 몸단장은 사회주의조선의 문명 수준을 반영한다.”라면서, 북한 주민들의 옷차림과 몸단장이 “사회의 모습을 비쳐 주는 하나의 거울”이라고 교양하고 있다(김광명, 2020. 6. 14.). 특히 평양시 같은 경우는 청년들에게 특정 옷차림과 머리 모양을 요구하며 수도의 모습과 사회의 분위기에 조응하기를 독려하고 있다. 당국이 강조하는 ‘조선인민의 감정과 정서’ 혹은 ‘사회주의 생활양식’은 민족 옷 또는 조선 옷에 치우치는 경향이 농후하지만, 현실의 북한 주민들은 전통적이며 현대적 미감을 강조하는 조선 옷보다는 가격 차이가 반영되는 옷차림으로 타인과의 차별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과시 욕구를 드러내고자 한다. 대표적인 것인 평양시 주요 거리에 등장하는 맞춤옷집들이다. 최근 북한 주요 거리에 등장하고 있는 종합양복점에서는 재단사가 소비자의 체형과 기호에 맞게 직접 옷을 만들어 판매한다. 소비자들도 착용감이 좋아 호평한다고 한다(Choe, 2020. 7. 26.). 북한이탈주민들은 이와 같은 맞춤옷을 ‘기성복’이라고 불렀다. 장마당 의류 매장에서 파는 의류

와 달리 기성복은 신체 크기별로 다양하게 있으며 디자인이 좋아 가격은 비싸더라도 선호한다고 했다. 2012년 완공된 평양시 창전거리에 창전옷집, 선경옷집 등의 점포가 생기면서 시작된 전문 맞춤옷집들이 이제는 평양시 각 구역마다 ○○종합양복점이라는 상점의 형태로 기성복 맞춤옷을 주문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백화점에 여성, 남성, 아동복 코너가 신설되고 다양한 북한산 제품들과 중국산 의류 그리고 유명 브랜드 의류도 판매되고 있다.

나. 가전제품과 핸드폰의 사용 증가

북한 경제난의 핵심이 식량난, 외화난, 에너지난이라고 할 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에너지 문제이다. 화력발전소와 수력발전소를 통한 자연 에너지원만으로는 산업 생산은 물론이고 가정용 생활필수품조차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아파트를 지어도 10층 이하는 모두 걸어 다니도록 한다거나, 최근 고층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운행 시간이 정해져 있어 제시간에 엘리베이터를 타야만 해서 벌어지는 사례들은 북한의 에너지난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에너지 부족으로 북한 주민들은 그동안 매일 국가가 제공하는 1~2시간의 전력을 충전하여 전등, 라디오, 전기밥솥(밥 가마) 등의 필수적인 생활전기만 사용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태양열을 통한 전기 생산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충전 배터리의 용량이 증가하면서 개인들의 전력사용량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북한 주민들의 주거생활이

전력사용 증가로 인해 변화한 측면이 많다. 대표적인 것은 가전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전자기기의 사용이 늘어난 것이다.

유니세프(UNICEF)와 북한의 중앙통계국이 공동 조사하여 발표한 ‘2017 DPR Korea MICS’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전자기기 중 텔레비전(TV) 98.2%, 라디오 94.1%, 시디(CD)재생기 75.5%, 핸드폰 66.4%, 컴퓨터 18.7% 순으로 보유율이 나타났다(UNICEF, 2018, p. 31). 반면 2019년에 실시한 통일부 심층조사에서는 텔레비전(TV) 70.8%, 시디(CD)재생기 48.7%, 핸드폰 14.3%, 컴퓨터 8.8% 순으로 보유율이 나타났다. 두 개의 조사에서 각 항목별 응답률이 다른 이유는 통일부 심층조사의 제한성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누적 데이터가 최근으로 올수록 감소하고 있는 데다가 국경 지역에 편중된 사람들의 응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MICS 조사결과와 비교한다면 오히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전자기기의 사용이 계층별·지역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서울대 사회변동조사에서는 2019년을 기준으로 할 때 핸드폰을 보유했다는 응답은 62.9%, 컴퓨터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4.0%로 나타났다(천경효 외, 2020, pp. 66-68). 특히 서울대 사회변동조사는 계층별 이용률을 조사하여 분류하였다.³⁾ 이에 따르면 계층별 차이가 가장 큰 전자기기는 핸드폰(북한 표현으로 손전화)이었다. 핸드폰은 상층에서 88.2%로 나왔으나 하층에서는 35.7%로 나타났다. 또한 컴퓨터

도 계층별 이용 경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상층은 58.8%이고, 하층은 21.4%였다. 이와 같은 계층별 차이가 앞선 MICS에서는 핸드폰, 컴퓨터가 높은 비중을 나타낸 반면, 통일부 심층조사에는 낮은 비중으로 나타난 이유이기도 하다. 2020년 기준 조사에서는 텔레비전(TV)의 보유율은 약간 증가한 반면 시디(CD)재생기의 보유율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북한에서 유에스비(USB)를 통한 영상물의 녹화자료를 시청하는 것이 확산된 결과로 추정된다(정은미, 2020).

주방용 전자제품의 사용도 확산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냉장고와 세탁기를 꼽을 수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도 가정에서 냉장고를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냉장고와 세탁기의 보급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대 사회변동조사를 보면 냉장고 보유율은 2019년

31.0%, 2020년 35.8%로 나타났고, 세탁기 보유율은 2019년 18.1%, 2020년 23.9%로 조사되었다(천경효 외, 2020; 정은미, 2020).

그러나 이 역시 소득 계층별 차이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대 사회변동조사에서 가구별 가전제품 품목 중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의 보유율을 계층별로 조사하였다. 이 응답을 보면 전기밥솥, 그리고 냉장고, 그다음이 세탁기였다. 세탁기 보유율의 비중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기밥솥의 경우는 보편화되어 중층에서 72.9%의 사용률을 보였다. 그러나 냉장고의 경우는 상위 계층에서 58.8%의 보유율을 보이는 반면 하위 계층에서는 10.7%로 나타났다. 세탁기 역시 상위 계층에서는 29.4%인 데 반해 하위 계층에서는 7.1%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광케이블이 전역에 설치되고, 핸드폰이 보편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시점은 2011년

표 2. 계층별 가전제품 보유율/경험률

(단위: %)

구분	상층	중층	하층
텔레비전(TV)	94.1	91.4	78.6
시디(CD)재생기	88.2	85.7	64.3
집전화	58.8	67.1	28.6
손전화	88.2	64.3	35.7
컴퓨터	58.8	44.3	21.4
냉장고	58.8	32.9	10.7
전기밥솥	88.2	72.9	46.4
세탁기	29.4	20.0	7.1

자료: 천경효, 강채연, 박상민, 이혜린, 정은미, 임경훈, 조용신. (2020). 북한사회변동2019: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보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p. 77.

3) 이 조사에서 계층은 북한이탈주민에게 북한에 거주할 당시 자신의 생활 수준이 어디에 속했는가에 대한 주관적 응답을 상층, 중층, 하층으로 나누어서 분류하였다.

을 전후 시점이다. 김정은 시기 매년마다 핸드폰 보급률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컴퓨터 이용자도 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2020년 현재 북한 원 기준으로 120만~130만 원, 중국 위안화 기준으로 2천 원을 마련해야 핸드폰 1대를 살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의 이동통신의 시스템의 특징은 기기를 구입하면 매월 일정한 사용량을 화폐로 환산하여 제공하고 다 쓰지 않은 금액을 현금화한다는 점이다.

“한 120만 원, 130만 원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선의 핸드폰은 살 때는 힘들어도. 매달 전화했더니 11월 초 하면 딸랑 하고 소리가 난다고 딸랑 하고 전화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깐 내가 만약에 전화를 할 데가 없어서 전화돈이 남죠? 그러면 70%를 빼 가지고 그걸 돈으로 팔아먹고 그 돈을 모으면 잠깐이고 ... 전화돈 산 돈이 나온다 말이에요.” (구술자 ○ 씨, 50대 여성, 사리원 농장원)

즉 초기 핸드폰 비용만 있으면, 사용하면서 제공되는 전화돈을 다 쓰지 않고 남겨서 현금처럼 계산하여 타인에게 팔 수 있기 때문에 매달 모으면 핸드폰 구입 비용을 상쇄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최신형 ‘신아리랑’은 북한 원 기준으로 3,500원으로 거래되는 신형으로, 이 기종만 전화돈 월 800원을 제공해 준다고 했다. 핸드폰 기기의 값이 높아지는 만큼 핸드폰에 제공되는 전화돈의 액수도 높아지면서 전화돈을 통한 거래도 증가하는 추세인 것이다.

다. 교통수단의 이용 확대

2000년대 시장화 시기를 관통하면서 가장 많이 변화한 것은 아마도 교통수단일 것이다. 대부분 초기에는 손수레를 밀고 다녔고, 자전거에 많은 짐을 싣고 다니는 모습이 보편적이었다. 고양이 담배 한 막대기 들고 손을 흔들면 지나가는 트럭이나 기업소 차를 얻어 타고 다니던 시절은 이제 지나갔다. 열차표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자주 운행되지도 않고 저속으로 움직이는 열차를 대신하여 사설 장거리버스가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지금은 시외교통, 시내교통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이탈주민 중 큰 도시 출신들은 위안화로 5원짜리 택시를 타 본 사람이 있으나 그 수가 매우 적었다. 대부분은 아는 사람의 기업소 운행의 자동차를 탔다고 했다. 반면 농촌 군에서는 보통 오토바이가 새로운 유행이 되고 있으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 사람은 제법 많았다.

최근 평양시, 청진시 등 큰 대도시를 제외한 북한 도시 주변에서는 오토바이가 유행이다. 이미 5년 남짓 유행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국경연선 지역에서는 오토바이가 최고의 이동수단이다. 국경 지역에서 오토바이 밀수업을 했던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2019년 오토바이의 시세는 1천 달러였고, 오토바이 점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자 하는 사람이 오토바이 주문을 해 오면 밀수를 하는 중개상인이 연계하여 오토바이를 구해다 주고 지불 가격을 받는 형식으로 운영했다고 한다. 북한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오토바이가 있지만 대부분은 중국산 중고 오토바이를 거래하고 있으며, 오토바이는 등록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이의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기관·기업소에 등록을 하고 개인이 사적으로 운행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했다.

돈이 있어도 번호를 받는 절차가 복잡하여 구입하지 않는 사람도 많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기모터가 장착된 새로운 자전거(충전식 전기자전거)가 유행하고 있다면서 이동수단에도 유행이 돌고 있음을 전했다. 또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으로 자전거가 전부이다 보니, 각 개인들은 일을 왕성하게 하려면 오토바이나 트럭 같은 것을 운행하고 싶어 한다고 했다. 북한 주민 세대에 자전거가 100% 다 있다고 치면, 오토바이는 한 30~40% 있을 정도로 오토바이는 지방에서 일반 교통을 대신하고 있다.

라. 문화·여가생활

시장 도입 초기부터 북한 당국이 가장 먼저 허용한 곳은 개인이 하는 편의봉사 부문이었다. 2000년대 초반 평성시에서는 재일교포들이 일본 가족들이 송금해 준 엔화를 목욕탕에 투자하여 운영하다가 망했다고 증언한 북한이탈주민이 있었다. 이후 김정은 시기에 북한 당국이 본보기 공장·기업소, 본보기 농촌마을 등 본보기 단위를 조성하면 ○○원이라는 이름을 붙인 복합문화시설을 건설하고 이를 홍보했었다. 목욕탕, 탁구장, 청량음료 매대, 게임방, 식당 등을 갖춘 이러한 시설들은 북한 주민들의 주요한 문화 휴식

공간이다.

2011년 8월 13일에는 평양에 문을 연 ‘은덕원’이라는 목욕탕이 북한 방송에 소개된 적이 있는데 ‘역포 구역에 종합적인 편의시설을 갖춘 은덕원’의 개건 현대화를 집중 보도하였다. 이후 평양시 각 구역마다 은덕원 외에도 창광원이나 북새원, 문수원 같은 대형 목욕탕이 복합문화 휴식 시설로 건립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소개 보도한 은덕원은 1층이 남녀 목욕탕과 가족탕, 독탕이고, 2층은 이발소와 미용실, 3층은 오락실과 체육시설이 있었다. 이와 같은 도시의 대형 복합문화 휴식시설이 지방에서는 소규모와 개인들이 운영하는 편의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주요 도시에 위치한 목욕탕이 ‘성매매’, ‘마약’, ‘불륜’의 근거지로 활용되고 있다는 보도와 같이 북한 주민들의 여가 문화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장사활동을 통해 큰돈을 벌게 된 사람들이 어린 첩을 두고, 마약을 하는 등의 비도덕적 일탈 행위도 확산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장원재, 2019. 11.).

북한의 시장화에서 파생된 소득의 불균형은 하위 계층들의 삶과 생활의 곤란으로 이어지며 노동의 상품화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 상위 계층들은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적당한 여가 문화와 휴식 공간을 갖고 있지 못한 현실로 판단된다.

4. 북한 주민 소비생활 변화의 함의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주민의 소비생

활은 일정 정도 회복된 것으로 파악된다. 시계열적으로 자료를 축적해 온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북한 사회변동조사 결과에서도 식생활의 개선이 확인되고 있으며, 국제기구가 보고한 북한 조사 결과에서도 영양 측면의 개선이 눈에 띈다. 이러한 소비생활의 회복과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에 대한 눈높이 상향은 향후 남북 교류·협력에서 몇 가지 함의가 있다.

우선 1990년대 중반 이후 인도주의적 지원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던 대북 지원 사업은 향후 북한의 이해와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북한 당국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는 자신들을 구호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대외적인 자존감의 표현이었지만, 이에 더해 대북 지원 사업의 수혜자라 할 수 있는 북한 주민들 역시 단순한 구호물자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대상과 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경공업 분야의 생산성 향상은 북한 당국의 이해와 주민들의 요구가 일치하는 지점이다. 북한이 경공업 분야에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고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활용하여 경제 분야를 도약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충분한 기술과 자원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유엔의 대북제재로 물자의 지원은 대부분 막혀 있는 상황에서 인적 교류를 통한 기술 이전 등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 경제의 시장화는 북한 내

에서 계층 간·지역 간 격차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 예로 북한 영유아 및 가임기 여성의 영양 상태를 나타내는 신체계측지표가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지역 간, 계층 간 영양불평등(Nutrition inequality)이 존재함에 주목해야 한다(신희영 외, 2019, p. 411). 유니세프의 2017년도 MICS 조사 결과를 보면 만성영양실조율, 급성영양실조율 등이 도시보다 비도시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UNICEF, 2018). 고난의 행군 시절 마을 뒷산이나 텃밭 등 자연 자원을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는 비도시 지역이 식량 사정이 상대적으로 좋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는 도시 지역의 생활 수준이 더 높아지면서 비도시 지역과 격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른 지표들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계층 간·지역 간 격차는 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개발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북한이 인민 생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홍보하는 시설들의 상당수는 평양을 중심으로 한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남한이 서울을 중심으로 집중화되는 것만큼 북한 역시 평양에 자원을 집중하면서 평양 이외의 지역 개발은 소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대북 교류·협력에서 이러한 지역적 격차를 고려하여 북한 내 전략적 지역을 선택하여 지원·협력하고, 최소한의 모니터링이 수반될 수 있도록 기획 단계부터 협상을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5. 나가며

북한은 오랜 시간 자립경제를 표방하고 글로벌 차원의 교류·협력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1990년대 경제난 이후 소위 '시장화'의 시간을 거의 30여 년째 보내고 있다. 시장경제가 제공하는 경제적 풍요는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으며,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배제한 북한의 시장도 시장화 이후 이전보다 나은 경제적 풍요를 누릴 순 있지만, 모든 주민들이 공평하게 누릴 순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시장화 이후 북한에서도 소득 격차가 발생하고, 소득 격차는 부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것이며, 부의 불평등은 기존 북한 사회가 관행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권력이나 신분과 재결합을 통해 다양한 사회격차를 발생시킬 수 있다.

2003년 북한에서 종합시장(market place)이 등장한 이후 관련 연구들은 북한에서 시장을 매개로 한 장사활동이 소득 차이를 발생시킨다고 보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사회주의 속에서 생성된 붉은 자본가로서 '돈주'라는 개인 축재 상인에 주목하여 왔다. 현재는 거시적 측면에서 북한 사회의 계층·세대·지역적 격차를 논하기도 하고, 미시적 측면에서 소득·주거·교육·정보·건강 부분의 격차를 추적 분석하고 있다. 물론 연구자마다 사회격차를 논증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사회 균열의 측면에서 갈등과 정쟁의 점화를 논하는 한편, 사회 다양성 측면에서 새로운 계층의 등장과 선진 사회로의 이행을 논하기도 한다. 다

른 한편으로 최근 북한 사회에 대한 연구에서는 '혼종성(hybridity)'이라는 개념에서 단순히 계획/시장, 집단주의/개인주의, 사회주의/자본주의 이행 등의 이분법적인 관점에서의 변화 추적을 비판하고, 북한 사회를 모순적인 요소들이 공존하는 좀 더 불명료하고 우발적인 관계들의 구성체로 접근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한재현, 고유환, 2020; 북한혼종사회연구단, 2021).

여러 관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북한 통치체제의 흐름과는 별개로 사회체제, 그 안에서의 북한 주민의 생활 형태는 크게 달라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회적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불평등한 사회주의로 변화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남북 교류·협력의 핵심은 단순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넘어서 북한의 낙후된 지역의 종합적 개발, 북한 인적 자본의 향상과 같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기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김광명. (2020. 6. 14.). 단정하면서도 소박하게. 로동신문.
- 김규철. (2021). 북한경제 추세에 대한 시각의 재검점: 생산과 후생 자료로 추정된 북한의 1인당 GDP 비교. KDI 북한경제리뷰, 2021년 6월 호, 3-35.
- 김병로. (2014). 북한의 시장화와 계층구조의 변화. 북한연구학회 기획, 김정은 시대의 경제화 사회: 국가와 시장의 새로운 관계. 파

- 주: 한울.
- 김정은. (2013. 3. 18.). 김정은 동지께서 전국경공업대회에서 하신 연설.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2015. 1. 1.). 신년사. 로동신문.
- 김정은. (2019. 1. 1.). 신년사. 로동신문.
- 노동신문. (2019. 1. 11.). 인민대중제일주의로 빛나는 사회주의 우리 조국.
- 리기성. (2017).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경제개괄. 조선출판물수출입사.
- 북한혼종사회연구단. (2021). 북한의 사회변동과 혼종성 1. 파주: 한울.
- 신희영, 이해원, 안경수, 최소영, 박샘나, 전유선 ... 정주. (2019). 2019년 개정판 북한 보건의료 백서. 보건복지부·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 심철룡. (2019). 현시기 농장책임관리제의 경제적 공간리용의 특성. 경제연구, 2019년 4호.
- 양문수. (2016).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 아세아연구, 59(3), 114-159.
- 양문수. (2010). 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성격·메커니즘·함의. 파주: 한울.
- 양문수. (2014). 김정은 시대의 경제개혁과 시장화. 북한연구학회 기획, 김정은 시대의 경제화 사회: 국가와 시장의 새로운 관계. 파주: 한울.
- 양문수. (2017). 김정은 집권 이후 개정 법령을 통해 본 '우리식경제관리방법'. 통일정책연구, 26(2), 81-115.
- 이규창, 나용우, 이상신, 이우태, 조성은. (2020).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인도협력: 코로나19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47-76.
- 이종운. (2017). 북·중 의류 생산네트워크의 형성과 구조적 특성: 대북 위탁가공거래를 중심으로. 한국연구재단.
- 장원재. (2019. 11.). 장원재의 북한요지경: '마약의 나라' 북한 - 주민의 30%가 마약 상복. 월간조선.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H&nNewsNumb=201911100048>에서 2020. 10. 1. 인출.
- 정은미. (2020). 북한 의식주 생활 변화와 정보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화상회의 (2020. 10. 29.).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본 포스트 하노이 북한사회 변화 자료집.
- 조성은, 민기채, 김예슬, 김유휘, 주보혜, 송철중, 백종만, 구인회, 박희진, V. Vanitcharearnthum, M. Ducanes. (2020). 남북 간 사회격차 완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복지체제 구축 방안 연구: 북한 주민의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천경효, 강채연, 박상민, 이해원, 정은미, 임경훈, 조용신. (2020). 북한사회변동2019: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보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한재현, 고유환. (2020). 북한사회인식의 습속과 혼종성이라는 문제설정. 북한학연구, 16(1), 113-157.
- Choe, Yong Nam. (2020. 7. 26.). Tailor shop flourishes with seasonal fashions, *The Pyongyang Times*.
- UNICEF. (2018). *2017 DPR Korea MICS*. UNICEF.

Changes in North Korean Consumer Life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Cho, Sungeun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regarded to have chosen, in and after the 2000s, a dual economic structure, leaving the consumer goods sector such as the light industry and material distribution to the market, while still maintaining its direct control over the military and heavy industry sectors. Also, in line with its governance strategy for furnishing all people with a “civilized living” by “building a socialist econom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attempted to foster the light industry and modernize the health care sector. Accordingly, changes have been observed in the consumer life of North Koreans, including the diversification of clothing style, the emergence of clothing brand names, the increase in the use of home appliances and mobile phones, the expansion of transportation use, and the increase of recreational facilities for leisure use. However, the trend of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has led to increased income inequality and in turn has made life difficult for the lower classes whose labor is being commercialized. Meanwhile, the upper classes have no culture of leisure and find themselves unable to find places to take rest. Considering this situation, inter-Korean bridging and cooperation for the future needs to be planned and promoted from a long-term and macro perspective, seeking the wide-ranging development of North Korea's underdeveloped regions and the improvement of North Korean human capital, beyond simple humanitarian aid.